

자산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김도균**

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복지태도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자산기반복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비계급성), 복지확대에 동의하더라도 복지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비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복지태도의 특징을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로 재규정하고, 이러한 특징이 주택소유가 공적 복지를 대신해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대체가설'과 내 집 마련 부담이 클수록 복지증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상쇄가설'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에 대한 분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태도를 교차해서 구한 네 가지 복지태도(적극적 복지, 증세 없는 복지, 소극적 복지, 적극적 반복지)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했다. 연구결과 첫째, 대체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복지태도에 관한 한 소득보다는 자산 규모에 따른 계급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향은 중·고령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며, 둘째, 상쇄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자산 계층은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혹은 비일관된 복지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비계급성, 비일관성, 대체가설, 상쇄가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3045275). 또한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3089203).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인구정책연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dkkim20@jeju.ac.kr)

1.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정치이슈로 부상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확대 등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보장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보편복지 논쟁으로 발전하면서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확대·발전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는데, 그 결과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수혜대상의 선별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복지정치의 양상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특징과도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의 주요 특징으로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지적해 왔다. 일반적으로는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태도의 계급적 성격이 발견되지 않고(비계급성), 저소득층은 복지확대에는 동의하더라도 복지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비일관성). 이러한 복지태도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은 증세 없는 복지정치와 동전의 양면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어 왔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복지태도의 특징을 자산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주택소유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기존 가설을 주택소유가 복지국가를 대신해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대체가설’과 내 집 마련 부담이 클수록 복지증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상쇄가설’로 세분화해서 검토하고,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설명한다.¹⁾ 이를 통해 소득보다는 자산을 중심으로 한 계급·계층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복지욕구와 내 집 마련 욕구 등에 따른 증세 없는 복지태도는 나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케메니가 제시한 ‘상쇄가설(trade-off relationship hypothesis)’과 캐슬스가 제시한 ‘대체가설(또는 자기보험가설)’은 모두 주택소유와 복지국가 간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종 동일한 주장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케메니의 주장은 내 집 마련 규범이 복지증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캐슬스의 주장은 주택자산이 복지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주장은 구분해서 다를 필요가 있다(Van Gunten and Kohl, 2021). 보다 자세한 설명은 2-2절 참조.

자산소유와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복지대체수단으로서 자산소유가 재분배 혹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즉 자산기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가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택자산은 사회적 위험에 닦혔을 때 사적 안전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설을 따라 김항기·권혁용(2017)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가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철승·황인혜·임현지(2018)는 소득과 자산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자산규모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자산변수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자산변수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저소득층에서 반복지 태도가 발견되고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간에 비일관된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복지체험 부족과 이데올로기적 통합성의 결여를 지적한다. 반대로 고학력과 고소득 계층에서 친복지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를 민주화 세대의 계몽된 이타주의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정보화 세대에서 비일관된 복지태도가 발견되는 이유는 공정성에 민감한 정보화 세대의 세대적 특징으로 설명한다(김영순·노정호, 2017).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을 세대 경험이나 가치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반면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 글은 자산기반복지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비일관된 복지태도로 지적되는 증세 없는 복지태도 또한 자산변수를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자산규모가 큰 경우에는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케메니가 지적하는 것처럼 내 집 마련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저자산 계층 또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복지증세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의 복지욕구가 강한 중·고령자 세대보다는 내 집 마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에서 복지증세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산이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서 보면, 저자산 계층에서는 재분배 정책은 선호하면서도 복지증세에는 부정적인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복지태도는 중·고령자 집단보다는 젊은 연령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기존에 제시된 '비계급성' 명제를 자산기반 복지태도, '비일관성' 명제는 증세 없는 복지태도로 재규정하고, 이를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산이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해 온 상황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계급

적 이해관계가 소득보다는 자산을 중심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둘째, 내 집 마련 규범이 강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자산 계층은 복지확대는 찬성하더라도 복지증세에는 부정적인 증세 없는 복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셋째, 복지욕구와 내 집 마련 욕구는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집단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복지 욕구가 높은 중·고령자 집단은 자산규모에 따라 '적극적 복지 집단'(복지확대 및 복지증세)과 '적극적 반복지 집단'(복지축소 및 증세반대)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청·장년 집단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 연구는 2021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 분배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이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복지태도에 관한 주요 변수들과 인구사회변수 및 소득·자산·부채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해서 자산변수가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령집단별로 자산변수의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연령과 자산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모델에 포함한다. 둘째,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교차해서 복지태도 유형을 '적극적 복지', '증세 없는 복지', '소극적 복지', '적극적 반복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항 로짓모형을 이용해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기존 연구 검토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인 계급·계층(혹은 소득) 가설이 한국의 경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계급·계층 가설은 직종이나 고용 지위, 소득수준 등 계급이나 계층을 규정하는 전통적인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효과가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잘 부합하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 계층일수록 복지욕구가 높기 때문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Meltzer & Richard, 1981; Svallfors, 2007).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계급 혹은 계층 변수가 복지태도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가설과 반대되는 영향력을 보여 왔다. 노동계급과 저소득 계층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김영란, 1995; 김영순·여유진, 2011; 노대명·전지현,

2011; 이성균, 2002; 주은선·백정미, 2007).

이러한 ‘비일관성’과 함께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 복지태도의 경향은 ‘이중성’ 혹은 ‘비일관성’이다. 노동계급과 저소득 계층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더라도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비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지지하면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비일관된 복지태도에 대한 지지는 전문직이나 고소득층보다는 단순노무직이나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중예·김현섭, 2017; 김사현, 2015; 김수정·남찬섭,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

전통적인 계급·계층 가설과는 달리 소득이나 직종 변수가 아니라 노동시장 지위 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효과를 고려할 때 계급·계층 가설이 강조하는 소득이나 직종 변수보다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labor market risk)과 복지태도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업의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계층일수록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고용불안정성과 소득수준의 상호작용이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usack, Iversen & Rehm, 2006; Rehm, 2011; Rehm, 2016). 한국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도 노동시장 지위는 소득이나 직종 변수에 비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명확하다. 정규직 여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좀 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이주희, 2014). 종사상지위를 고려하여 자영자와 노동자, 또는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노동자의 차이를 살펴보아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가 발견된다(류만희·최영, 2009;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소득이나 직종변수 처럼 모호한 양상을 보인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와 돌봄노동 등의 문제로 인해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반복지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수정, 2015;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학력 변수와 복지태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안정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hm, 2016).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수정·남찬섭,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연령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도 모호하다. 대체로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 노년층에서 복지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노년층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수 있다(Pampel & Williamson, 1988).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노년층에서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 지적된다(김수완·김상진·강순화, 2014; 김영순·노정호, 2017; 김영순·여유진, 2011).

김영순과 노정호는 학력이나 연령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예상과 다른 효과를 보이는 이유를 세대 효과를 통해 설명한다(김영순·노정호, 2017). 세대는 이념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복지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효과를 통제한 후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산업화 세대는 뚜렷하게 반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산업화 세대의 역사적 경험과 이념적 편향이 복지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년층의 반복지적 태도는 연령효과보다는 세대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학력과 복지태도의 관계가 서구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산업화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민주화 세대의 이념적 이타주의 경향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학력 변수가 노동시장 지위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세대 같은 비경제적 요인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순·노정호, 2017; 김영순·여유진, 2011).

소위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은 조세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편향의 문제로도 설명된다. 증세에 대한 지지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외에도 조세제도의 형평성이나 과세체계의 공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금종예·금현섭, 2017; Rothstein, 2011). 한국은 실제 조세부담 수준이 낮음에도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 이것은 조세 행정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본인의 조세부담이 높고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세금 부담 인식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조건화하게 된다(금종예·금현섭, 2017).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비일관된 복지태도는 일견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수정·남찬섭, 2015).

최근에는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소유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케메니(Kemeny, 2005)와 캐슬스(Castles, 1998)가 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과 부동산 자산이 복지태도나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안셀(Ansell, 2014)은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를 강조하고 자산소유가 복지국가에 대한 기능적 등기물로서 복지선호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 소유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주택 소유와 복지태도의 관계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념적으로 우파에 가까운 집단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자산 소유가 복지국가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념적으로 좌파에 가까운 집단에서는 자산 변수와 무관하게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우파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산가격의 하락 국면에서는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Ansell, 2014).

반 군텐과 콜(Van Gunten & Kohl, 2020)은 과거에는 복지지출과 주택 소유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면 최근에는 이 관계가 양의 관계로 역전되었다고 하는 가설을 제시한다. 그리고 최근 복지국가 지출과 주택 소유율이 양의 상관관계로 역전된 이유로 복지지출이 삭감되기 어려운 것처럼 주택 소유율도 하락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중래치효과'(dual ratchet effect)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역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는 가계신용의 확대 등 금융정책의 변화로 복지지출은 유지하면서 부채를 이용한 주택구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택소유와 복지국가 간의 상쇄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주택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다룬 초기의 연구로는 안상훈·박종연·김수완(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주거와 관련된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총체적 복지태도와 프로그램 특수적 복지태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신정치론(new politics)의 관점에서 주거관련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소유와 복지태도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항기·권혁용(2017)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자산변수뿐만이 아니라 부채변수까지 고려하여 자산부채 레버리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레버리지 가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저서 집을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소유나 자산규모 자체보다는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이 실질적인 복지대체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크다면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복지패널 분석 결과를 보면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산부채 레버리지 값이 클수록 복지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 때문에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욕구는 줄어들지만 부채규모가 자기보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자산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복지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항기·권혁용, 2017).

이철승·황인혜·임현지(2018)는 소득과 자산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기존의 계급론적 가설을 수정하는 한편 자산의 기능적 등가물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반복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비계급성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이철승·황인혜·임현지

(2018)는 전통적인 계급·계층 가설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은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한 보험 욕구도 클 수밖에 없다는 보험욕구 가설을 제시한다. 더구나 공적인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한국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계급론적 가설과 달리 보험욕구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예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욕구 가설은 기능적 등가물로서의 자산 효과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등가물 가설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로 인해 소득수준도 높고 자산수준도 높은 경우에는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가 소득의 보험욕구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킬 것이다. 반면 소득 수준은 높지만 자산 수준은 낮은 경우에는 보험욕구는 큰 반면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선별복지보다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보편복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소득과 자산의 상호 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소득과 자산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이철승·황인혜·임현지, 2018).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복지태도가 서구와는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 호명된 역사적 경험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김수정, 남찬섭, 2015), 복지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서 자산소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김도균, 2018). 그러므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소득이나 고용지위 같은 변수보다는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복지태도의 특징을 이념이나 세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거나 또는 자산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복지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복지태도의 특징을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로 재규정하고,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소유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주택 소유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로는 케메니(Kemeny, 2005)가 제시한 '주택 소유-복지국가 상쇄가설'(이하 상쇄가설)과 캐슬스

(Castles, 1998)가 제시한 '자기보험 수단(혹은 복지대체수단)으로서 주택 소유 가설'(이하 대체 가설)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이 두 가지 가설은 동일한 주장으로 간주되지만 두 가설은 복지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먼저 상쇄가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 소유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해 케메니는 주택 소유 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생애주기의 전반부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거비용이 생애주기의 전반부에 집중된 결과 가계의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부담을 버겁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 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주택 소유율과 복지국가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택 소유율이 높을수록 복지국가 지출 규모가 작고, 복지국가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주택 소유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케메니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상쇄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Kemeny, 2005).

둘째, 대체가설은 캐슬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캐슬스는 주택 소유율과 복지국가 발전에 주목하기보다는 주택 소유와 연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자산이 복지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케메니가 내 집 마련 규범이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반면, 캐슬스는 주택자산의 복지기능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캐슬스는 연금삭감 같은 복지국가 축소가 자기보험 수단으로서 주택 소유를 자극할 수 있으며, 또는 반대로 주택 소유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Castles, 1998). 이렇게 주택자산이 복지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캐슬스의 대체가설은 케메니의 상쇄가설과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산소유와 복지국가에 관한 케메니와 캐슬스의 가설은 한국사회의 복지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할까? 우선 케메니와 캐슬스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영순·여유진(2011)을 비롯한 몇몇 연구들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을 문제시했지만, 김수정·남찬섭(2015)의 지적처럼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 간에 어떤 논리적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확대는 지지하면서도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복지확대 측면과 복지증세 측면으로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대체수단으로서 주택자산은 복지확대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복지증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자산규모가 크다면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자산 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내 집 마련 부담 때문에 복지증세에는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 집 마련과 같은 자산축적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변수는 생애과정의 단계에 따라서도 복지태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시기 복지국가의 발달이 지체되면서 주택자산이 공적 복지를 대체하는 안전망으로서 작동해 왔다. 만일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악착같이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마련하면 내 집부터 장만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문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비록 지난 20여 년 동안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고는 하지만 공적 복지의 수준이 중산층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적인 자산축적은 여전히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도균, 2018). 이런 맥락에서 보면 캐슬스가 지적한 것처럼 복지대체 수단으로서 주택소유는 복지확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 동안 내 집 마련 규범 또한 매우 강하게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 발달의 지체 하에서 주거복지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능한 빨리 내 집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과 자산축적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 자산불평등과 자산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내 집 마련과 자산축적에 대한 집착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도균, 2020). 이런 맥락에서 보면 케메니가 지적하는 것처럼 내 집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복지증세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젊은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자산소유는 복지확대 또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은 복지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소유 규모가 클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자산의 기능적 등가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자산 계층은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의 필요성과 경제적 부담은 복지증세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소유 규모가 큰 계층뿐만 아니라 아직 자산형성에 성공하지 못한 저자산 계층에서도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셋째,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집단별로 상이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연령계층별로 주택소유율 차이가 크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에는 자산과 복지태도의 관계가 연령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김도균, 2021). 복지욕구가 큰 중·고령 연령집단에서는 자산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큰 반면, 내 집 마련 욕구가 큰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자산이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연령집단별로 자산변수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자산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할 확률이 증가하고,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산규모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이다.

가설 2-1: 중·고령 연령 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증세에 반대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2: 청·장년 연령 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복지증세에 반대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3) 분석모형

이 연구는 순서형 로짓모형과 다항 로짓모형을 이용해 자산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는 각각 5점 척도와 4점 척도로 측정된 순서형 변수이다. 그런데 종속변수가 순서형 변수일 때 다중회귀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범주에 민감하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순서형 변수일 경우 자료 내의 관계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김순귀 2014).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순서를 고려한 로짓을 정의해서 계수를 추정하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복지태도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갖는 명목형 반응변수일 경우에는 이항 로짓모형이나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 중 하나를 기준범주로 선택한 후에 기준 범주와 나머지 각 반응범주를 짝을 지어 로짓을 정의하고, 각각의 이항 로짓 모형을 동시에 추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취급하는 복지태도 유형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교차해서 정의하기 때문에 변수값이 4개인 명목형 반응변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복지태도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자산, 부채 변수들과 함께 연령, 주택 소유, 성별, 학력, 노동시장지위, 이념 같은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또한 연령집단별로 자산

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자산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급변수로서 직종 변수 대신 노동시장 위험을 보다 잘 반영하는 노동시장 지위 변수를 포함한다.

3. 변수와 기초통계

1) 자료 설명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21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 분배인식 조사’ 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만 20~69세 이하 성인 2,500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17개 시도로 모집단 비율 고려하여 조사규모를 확정하였다. 주민등록인구통계 2021년 9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역(동부/읍면부), 연령대(20대~60대), 성별(남,여) 분포를 반영해 표본을 설계하였다. 조사 방법은 외부 조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자료는 표본을 2,500명으로 설계하여 연령집단이나 학력, 노동시장 지위별로 대표성 있는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소득이나 자산, 부채 관련 조사의 엄밀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종속변수

이 글에서는 ① 복지확대 태도, ②복지증세 태도, ③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교차한 복지태도 유형 세 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취급한다. 복지확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다. ‘① 많이 줄여야 한다’부터 ‘⑤ 많이 늘려야 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복지증세를 측정하는 문항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문항이며 ‘① 적극 반대’부터 ‘④ 적극 찬성’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1]과 같다.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복지확대를 찬성하는 비율(복지확대 4~5점)은 59.56%이고,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비율(복지확대 1~3점)은 40.44%로 복지확대를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복지증세를 찬성하는 비율(복지증세 3~4점)은 48.96%이고,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비율(복지증세 1~2점)은 51.04%로 엇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²⁾

2) 설문조사에서 복지확대 문항은 많이 줄여야 한다부터 많이 늘려야 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현상태

복지태도 유형은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문항을 교차해서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째, 복지확대(4~5점)와 복지증세(3~4점)를 모두 찬성하는 경우를 '적극적 복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둘째, 복지확대(4~5점)는 찬성하지만 복지증세(1~2점)는 반대하는 경우 '증세 없는 복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셋째, 복지지출(1~3점)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지만 복지증세(3~4점)는 찬성하는 경우 '소극적 복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넷째, 복지지출(1~3점)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복지증세(1~2점)는 반대하는 경우 '적극적 반복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적극적 복지 유형이 34.96%로 가장 높고, 적극적 반복지 유형은 26.44%를 차지한다. 증세 없는 복지 유형은 24.6%, 소극적 복지 유형은 14.0%를 차지한다.³⁾

[표 1]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태도

(단위: 명, %)

복지지출	복지증세				
	①적극 반대	②반대	③찬성	④적극 찬성	전체
①많이 줄여야 한다	26 (1.04)	11 (0.44)	3 (0.12)	4 (0.16)	44 (1.76)
②다소 줄여야 한다	45 (1.8)	92 (3.68)	41 (1.64)	5 (0.2)	183 (7.32)
③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94 (3.76)	393 (15.72)	281 (11.24)	16 (0.64)	784 (31.36)
④다소 늘려야 한다	58 (2.32)	453 (18.12)	616 (24.64)	64 (2.56)	1,191 (47.64)
⑤많이 늘려야 한다	28 (1.12)	76 (3.04)	142 (5.68)	52 (2.08)	298 (11.92)
전체	251 (10.04)	1,025 (41.0)	1,083 (43.32)	141 (5.64)	2,500 (100.0)

3) 설명변수

설명변수로는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연속형 변수와 주택 소유 유무, 성별, 연령, 학력, 노동시장 지위, 이념 등의 범주형 변수를 포함한다. 소득과 자산, 부채 같은 연속형 변수는 로그변환을 취해서 활용한다. 로그 변환을 위해 '0'의 값은 '1'로 재코딩하여 로그변환을 취했다. 부채

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3점을 부여하였다. 여기서는 4~5번 응답자를 복지확대 찬성으로 분류하고, 3번 이하 응답자를 복지확대 반대로 분류한다.

3) 복지확대 문항에서 3번 이하로 응답하였지만 복지증세는 찬성하는 경우를 '소극적 복지'로 유형화한다. 소극적 복지 유형에 속할 경우 적극적 반복지 집단에 비해 복지확대 문항에서 3번 현상태 유지를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변수의 경우는 김항기·권혁용(2017)의 연구를 따라 자산 대비 부채 규모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산부채 레버리지 변수로 변환해서 활용하는데, 자산부채 레버리지 변수는 로그변환한 부채변수를 로그변환한 자산변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주택 소유는 무주택, 1주택, 다주택 3개의 범주로 측정한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이진변수이다.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10세 단위로 구분한 연령집단 변수를 사용한다. 학력은 고졸 이하, 대졸(3년제 이하), 대졸(4년제),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한다. 노동시장 지위는 임금근로자를 상층, 중간층, 하층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자영업과 실업자, 비경활인구(학생, 주부, 은퇴자 등) 범주로 포함한다.⁴⁾ 이 글에서 다루는 변수들의 기초통계값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구소득	2,500	308.95	337.98	4.47	5,196
총자산	2,407	695.84	905.52	1	17,900
총부채	2,500	83.73	165.35	0	2,200
자산부채 레버리지	2,391	0.40	0.44	0	2.73
이념	2,500	4.96	1.80	0	10

[표 3] 주요 범주형 변수들의 빈도값

변수		빈도	퍼센트
주택 소유	무주택	721	28.84
	1주택	1,614	64.56
	다주택	165	6.60
성별	여성	1,231	49.24
	남성	1,269	50.76
연령	20대	451	18.04
	30대	450	18.00
	40대	546	21.84
	50대	580	23.20
	60대	473	18.92
학력	고졸 이하	571	22.84
	대학 졸업 (3년제 이하)	383	15.32
	대학교 졸업 (4년제)	1,329	53.16

4) 임금근로자의 구분은 기업규모, 정규직여부, 노조유무를 기준으로 대기업-유노조-정규직, 중소기업-유노조-정규직, 대기업-무노조-정규직이 임금근로자 상층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무노조-정규직, 대기업-무노조-비정규직, 대기업-유노조-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 중간층,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중소기업-유노조-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 하층으로 구분한다(이철승, 2019).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217	8.68
노동시장지위	임금근로상층	497	19.88
	임금근로중간층	634	25.36
	임금근로하층	223	8.92
	자영업	252	10.08
	실업	247	9.88
	비경황	647	25.88

4. 분석결과

1) 복지확대 및 복지증세 태도

[표 4]는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소득, 자산, 자산부채 레버리지 변수와 함께 자산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했으며, 연령(준거집단=60대), 주택 소유(준거집단=무주택), 성별(준거집단=여성), 학력(준거집단=고졸), 노동시장 지위(준거집단=임금노동상층), 이념 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승산비(Odds Ratio)로 나타내었다.

먼저 소득변수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계급가설보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는 보험욕구가설에 좀 더 부합하는 결과이다. 자산변수의 경우 가구의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지출의 확대와 복지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자산변수는 복지증세보다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자산의 복지대체수단 효과로 인해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약화되는 반면, 상쇄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자산규모가 낮은 계층에서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변수가 증세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부채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클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증가한다. 부채 규모가 클수록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집단별로 자산변수가 복지확대 및 복지증세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상이한지 살펴보고자 하자. 우선 연령변수를 보면 60대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나머지 연령집단은 60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복지지출 확대의 경우 30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복지증세의 경우 20대와 30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주로 젊은 연령집단에서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에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령집단별 복지태도는 자산규모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연령과 자산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60대 연령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나머지 연령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변수 자체는 마이너스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60대 연령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자산규모에 따라 복지확대 및 복지증세 태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젊은 연령집단일수록 자산규모에 따른 복지확대 및 복지증세 태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와 30대 집단에서는 연령과 자산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주택 소유 여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주택자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1주택자는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우세한 반면, 다주택자는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주택 소유 자체보다는 주택을 포함한 가계의 총자산 규모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풀이된다. 복지증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복지확대와 달리 복지증세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일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지위의 경우 임금근로자 상층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대부분 집단이 복지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금근로자 하층은 임금근로자 상층에 비해 복지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45% 정도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고용불안정성이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 집단에서 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지지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복지지출 확대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복지증세 태도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반면, 4년제대졸 집단에서는 증세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성향에 가까울수록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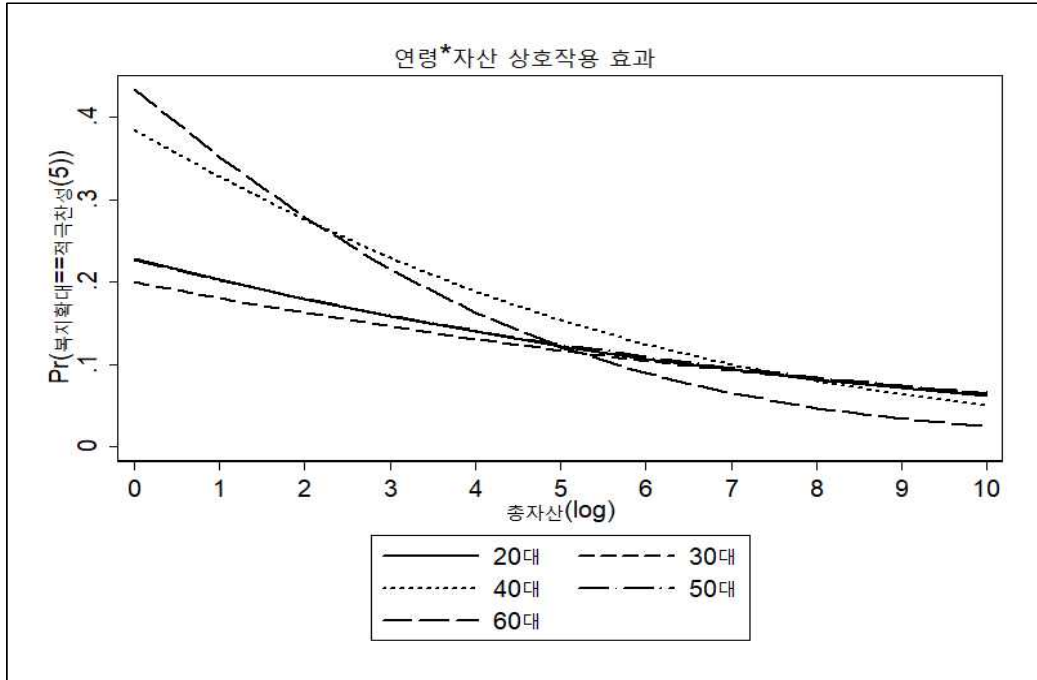
[표 4] 복지확대·복지증세 태도에 대한 연령-자산 상호작용 효과

	복지확대 (Odds Ratio/SE)	복지증세 (Odds Ratio/SE)
가구소득(log)	1.038 (0.063)	1.097 (0.065)
총자산(log)	0.710*** (0.055)	0.824** (0.066)
자산부채 레버리지	1.161 (0.107)	1.067 (0.098)
20대	0.387 (0.225)	0.275** (0.161)
30대	0.327* (0.196)	0.184*** (0.110)
40대	0.816 (0.496)	0.606 (0.375)
50대	0.382 (0.236)	0.55 (0.338)
20대*자산	1.212** (0.116)	1.221** (0.119)
30대*자산	1.241** (0.123)	1.275** (0.126)
40대*자산	1.1 (0.109)	1.086 (0.110)
50대*자산	1.219** (0.121)	1.097 (0.109)
1주택	1.108 (0.123)	0.872 (0.097)
다주택	0.95 (0.182)	0.722* (0.141)
남성	1.132 (0.092)	1.368*** (0.113)
전문대졸	1.087 (0.144)	0.792* (0.103)
4년제대졸	1.083 (0.113)	1.246** (0.131)
대학원 이상	1.016 (0.163)	0.975 (0.159)
임금근로중간층	1.116 (0.130)	1.028 (0.122)

임금근로하층	1.449** (0.236)	1.019 (0.165)
자영업	1.201 (0.185)	1.259 (0.195)
실업	1.176 (0.191)	1.247 (0.203)
비경제활동	0.945 (0.122)	0.881 (0.116)
이념	0.833*** (0.019)	0.819*** (0.019)
cut1	0.002***	0.021***
_cons	(0.001)	(0.012)
cut2	0.010***	0.214***
_cons	(0.005)	(0.118)
cut3	0.071***	3.878**
_cons	(0.039)	(2.146)
cut4	0.894	
_cons	(0.484)	
r2_p	0.027	0.028
N	2,391	2,391

연령집단과 자산규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연령집단별 자산규모에 따른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의 예측확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그림 1]은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5점 척도에서 ⑤번 응답자)에 속할 예측확률이 연령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40대 집단과 60대 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40% 정도에서 10%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와 30대, 50대 집단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복지확대 태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자산규모가 낮을 경우에도 복지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자산규모 증가에 따라 10%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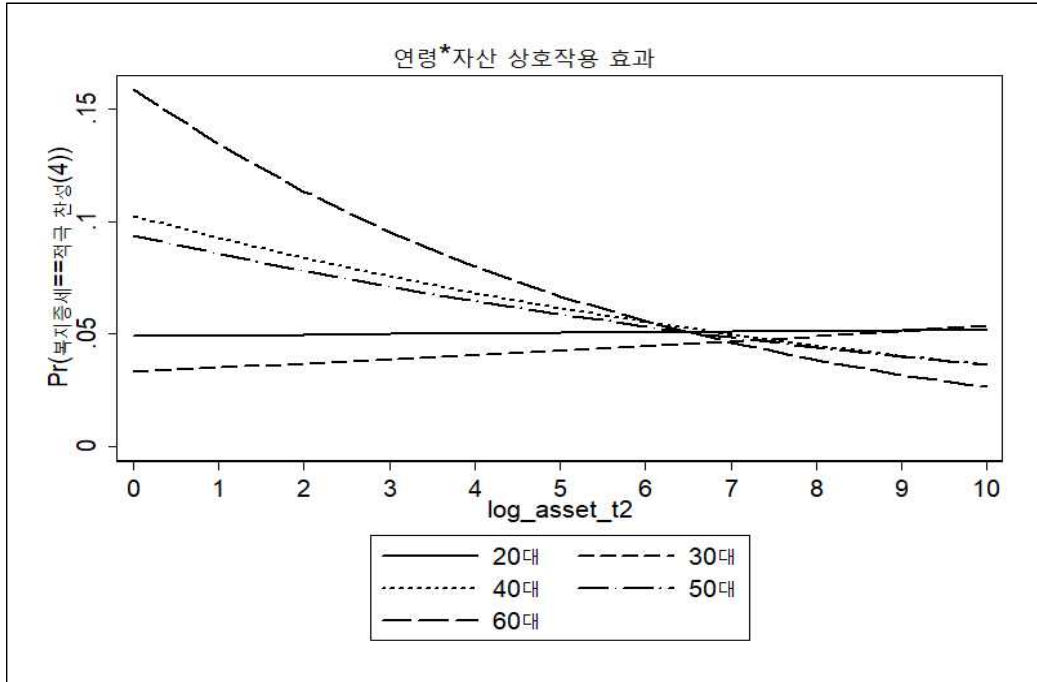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집단별 자산규모에 따른 복지확대 적극 찬성 예측확률



대체가설에 따르면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로 인해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40대와 60대 연령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60대 연령층은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산규모가 낮은 계층에서는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40대 연령층은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도 60대와 마찬가지로 자산규모에 따른 연령집단 내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30대와 50대 연령집단에서는 자산 규모가 낮은 계층에서도 복지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⁵⁾

5) 순서형 로짓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이 설명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6-1]은 복지확대 문항에 대해 ①번부터 ⑤번까지 응답 중 '매우 동의한다'(⑤번)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에 대한 그래프이다. 지면관계상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동의한다'(④번)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20~30대와 50대 집단의 저자산 계층에서 ④번 응답 확률이 40대/60대 보다 높다. '매우 동의한다'(⑤번)라고 응답할 확률은 40대, 60대 저자산 계층에서 높은 반면, '동의한다'(④번)라고 응답할 확률은 20~30대, 50대 저자산 계층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④번에 대한 예측확률과 ⑤번에 대한 예측확률 그래프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자산 규모가 낮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30대와 50대 저자산 계층에서는 복지확대 요

[그림 2] 연령집단별 자산규모에 따른 복지증세 적극 찬성 예측확률



[그림 2]는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증세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예측확률이 연령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40~60대 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증세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하락하는 반면, 20~30대 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증세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규모가 낮은 집단에서는 60대에서 복지증세를 찬성할 확률이 가장 높고 20~30대에서 복지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가장 낮다. 반면, 자산규모가 높은 집단에서는 복지증세를 찬성할 확률이 60대 집단에서 낮고, 20~30대 집단에서 높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고령자 집단은 복지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고 청·장년 집단은 내 집 마련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중·고령자 집단에서는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찬성하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청·장년 집단에서는 자산변수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약화되는 한편, 자산규모가 낮을수록

구에 대한 강도(④번)가 40대와 60대 저자산 계층의 복지확대 요구에 대한 강도(⑤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50대 집단이 20~30대 집단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장년 집단에서는 저자산 계층보다 고 자산 계층에서 복지증세에 대한 찬성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2) 복지태도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분분석

이 절에서는 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교차해서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네 가지 복지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준거집단은 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적극적 복지’ 집단이다.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집단을 ‘증세 없는 복지’ 집단, 복지확대에는 소극적이지만 복지증세는 찬성하는 집단을 ‘소극적 복지’ 집단, 복지확대와 복지증세를 모두 반대하는 집단을 ‘적극적 반복지’ 집단으로 구분한다. 분석결과는 승산비(odds ratio)로 나타내었다.

[표 5]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적극적 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다. 반면 자산규모가 클수록 적극적 복지에 비해 적극적 반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레버리지 변수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적극적 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연령별로는 60대 연령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젊은 세대일수록 적극적 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40대 집단에서 적극적 복지보다 증세 없는 복지 태도를 보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소극적 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20대 집단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적극적 반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은 20~30대는 6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40~50대는 60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적으로는 40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다. 주택 소유 유무의 경우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비해 적극적 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또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은 적극적 복지보다 증세 없는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이나 노동시장 지위 변수의 경우 뚜렷한 경향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에 가까울수록 적극적 복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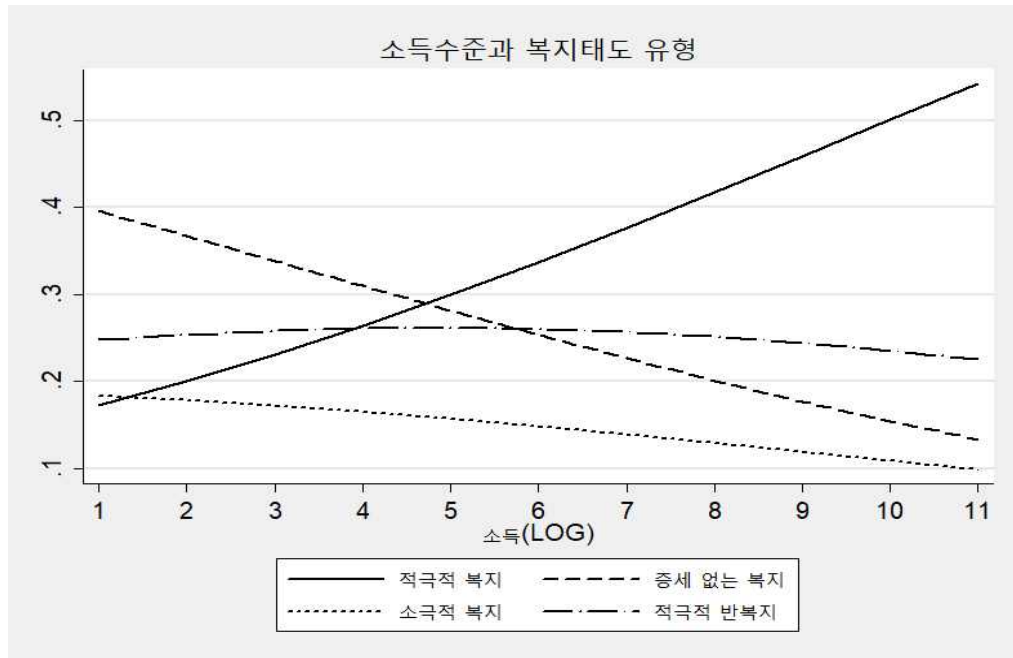
[표 5] 복지태도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준거집단(적극적 복지)	중세없는복지 (Odds Ratio/SE)	소극적 복지 (Odds Ratio/SE)	적극적 반복지 (Odds Ratio/SE)
가구소득(log)	0.800*** (0.068)	0.838* (0.085)	0.883 (0.075)
총자산(log)	0.936 (0.054)	1.064 (0.073)	1.200*** (0.071)
자산부채 레버리지	1.029 (0.131)	1.134 (0.172)	0.866 (0.114)
20대	1.873*** (0.367)	1.522* (0.327)	1.015 (0.189)
30대	2.144*** (0.422)	1.207 (0.275)	1.159 (0.217)
40대	1.580** (0.290)	1.016 (0.211)	0.728* (0.127)
50대	1.205 (0.219)	0.795 (0.164)	0.939 (0.152)
1주택	1.325* (0.210)	1.027 (0.189)	1.032 (0.161)
다주택	1.652* (0.470)	1.272 (0.407)	1.258 (0.336)
남성	0.627*** (0.073)	0.917 (0.126)	0.729*** (0.084)
전문대졸	1.241 (0.226)	0.667* (0.159)	1.179 (0.224)
4년제대졸	0.721** (0.108)	0.755 (0.130)	0.846 (0.126)
대학원 이상	0.753 (0.177)	0.669 (0.185)	0.957 (0.211)
임금근로중간층	0.948 (0.160)	0.888 (0.170)	0.903 (0.148)
임금근로하층	0.977 (0.218)	0.621* (0.177)	0.847 (0.192)
자영업	1.043 (0.227)	1.035 (0.251)	0.817 (0.177)
실업	0.836 (0.188)	0.672 (0.184)	0.778 (0.181)
비경제활동	1.082 (0.205)	0.979 (0.214)	1.406* (0.253)
이념	1.207*** (0.039)	1.180*** (0.044)	1.325*** (0.042)
_cons	1.086 (0.590)	0.422 (0.273)	0.164*** (0.090)
r2_p	0.041	0.041	0.041
N	2,391	2,391	2,391

[그림 3]와 [그림 4]는 소득수준과 자산규모에 따라 네 가지 복지태도 유형에 속할 예측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변화([그림 3])를 보면, 소득수준이 증

가할수록 적극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17.3%에서 54.2%로 증가하는 반면, 증세 없는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39.6%에서 13.4%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극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18.4%에서 9.9% 하락하고, 적극적 반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24.8%에서 26.2%로 소폭 상승하다가 22.5%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 소득수준별 복지태도 유형에 속할 예측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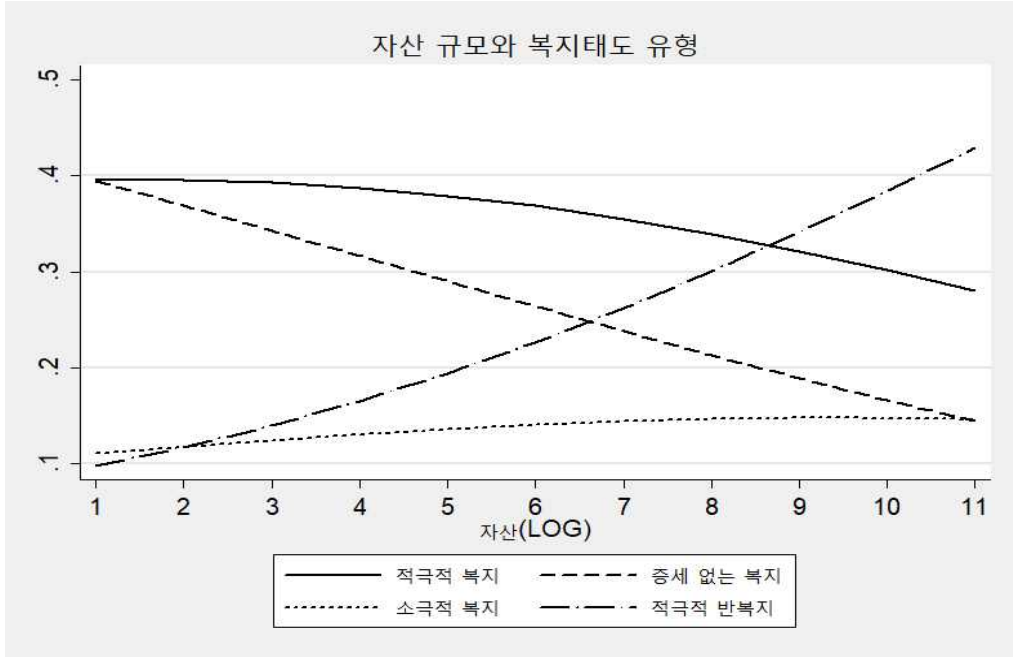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저소득 계층의 복지태도에서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림 3]에서도 저소득층은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가장 높고, 적극적 복지보다는 적극적 반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험욕구 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림 4]에서 자산규모에 따른 변화를 보면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적극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39.6%에서 28.1%로 하락하고, 증세 없는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39.5%에서 14.5%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극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11.1%에서 14.6%로 소폭 상승한다. 반면 적극적 반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9.8%에서 42.9%로 빠르게 증가한다. 저자산 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복지확대에 우호적이지만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 복지와 증세

없는 복지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반면 고자산 계층에 속할수록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모두를 반대하는 적극적 반복지 태도가 뚜렷하다.

[그림 4] 자산규모별 복지태도 유형에 속할 예측 확률



정리하면 소득과 자산 변수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점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적극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에는 적극적 반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소득과 자산 변수 모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증세 없는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은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저소득 계층과 저자산 계층에 속할수록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저소득 계층과 저자산 계층의 복지태도의 차이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 계층에서는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17.3%로 낮은 반면, 저자산 계층에서는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39.6%로 높다. 저자산 계층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와 함께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도 높게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높은 반면,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6) 적극적 복지 39.6%, 증세 없는 복지 39.5%로 이 둘을 합하면 저자산 계층에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예측확률은 79.1%이지만,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는 각각 39.6%와 39.5%로 절반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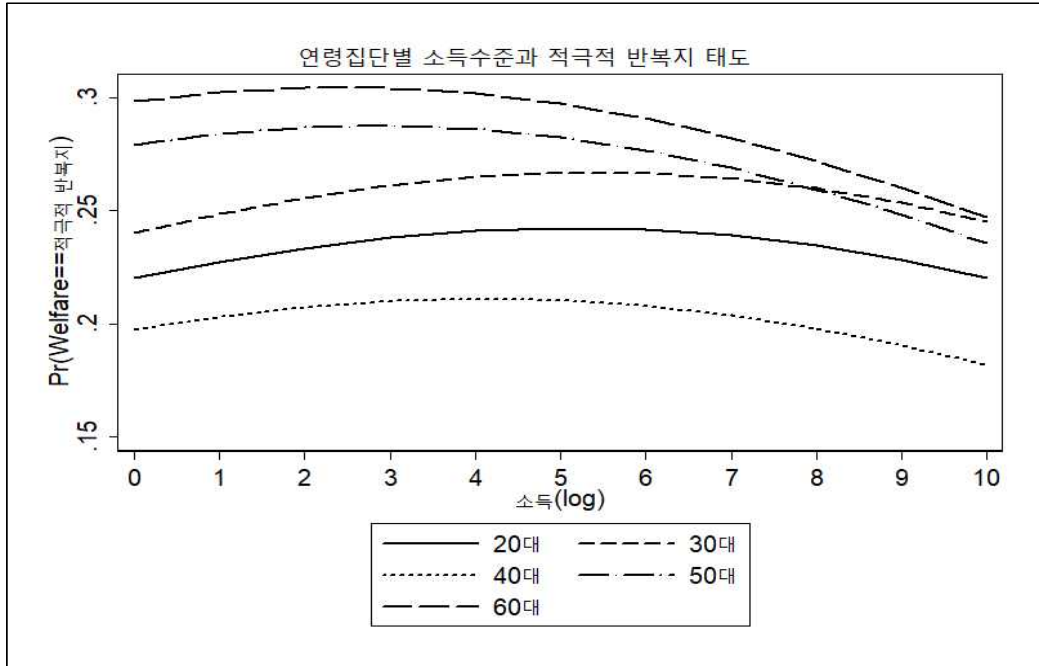
났다. 저소득 계층에서는 적극적 반복지 성향도 24.8%로 적극적 복지 성향보다 크다. 저자산 계층은 대체로 적극적 복지 집단과 증세 없는 복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 계층은 적극적 반복지 집단과 증세 없는 복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연령집단별로 소득과 자산에 따른 복지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연령집단별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복지태도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와 적극적 반복지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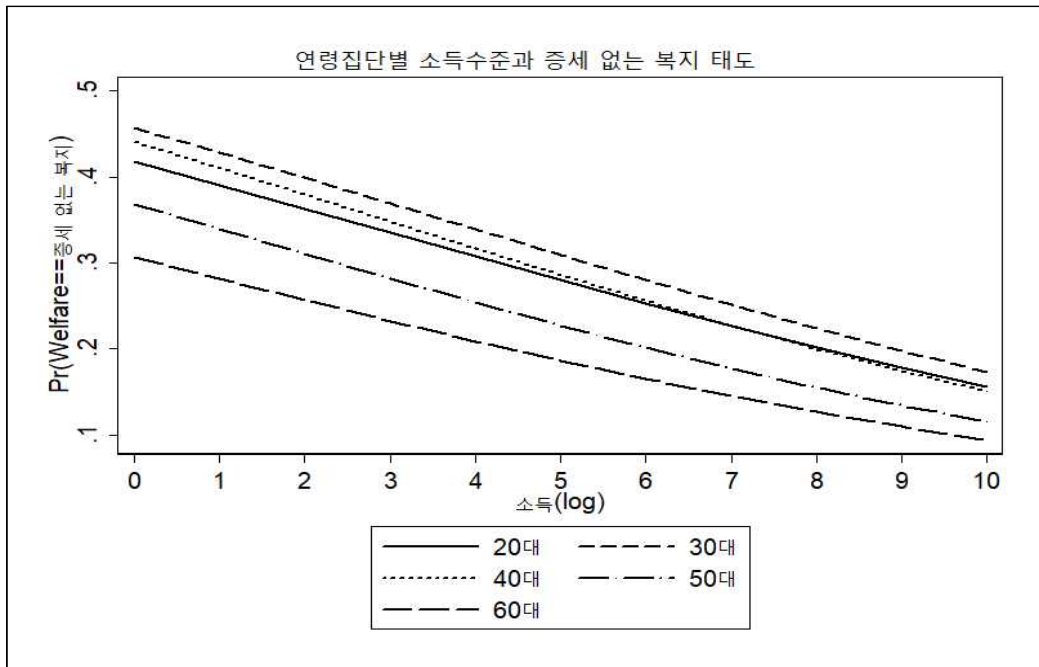
먼저 연령집단별 소득수준에 따른 적극적 반복지 태도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50~60대 저소득 계층에서 적극적 반복지 태도 경향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예외적 특징으로 중·고령자와 저소득층의 반복지 태도를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그림 5]에서도 확인된다. 중·고령자 계층에 비해 젊은 세대에서 적극적 반복지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40대 계층에서 적극적 반복지 태도가 가장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 반복지 태도에 비해 증세 없는 복지 태도는 대체로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저소득층의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이 모든 연령층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연령집단 별로 차이가 상당하며 저소득층 젊은 세대일수록 증세 없는 복지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40대 연령층과 5~60대 연령층 간에 증세 없는 복지 태도를 보일 확률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림 5] 연령집단별 소득수준에 따른 적극적 반복지 태도 예측확률



[그림 6] 연령집단별 소득수준에 따른 증세 없는 복지태도 예측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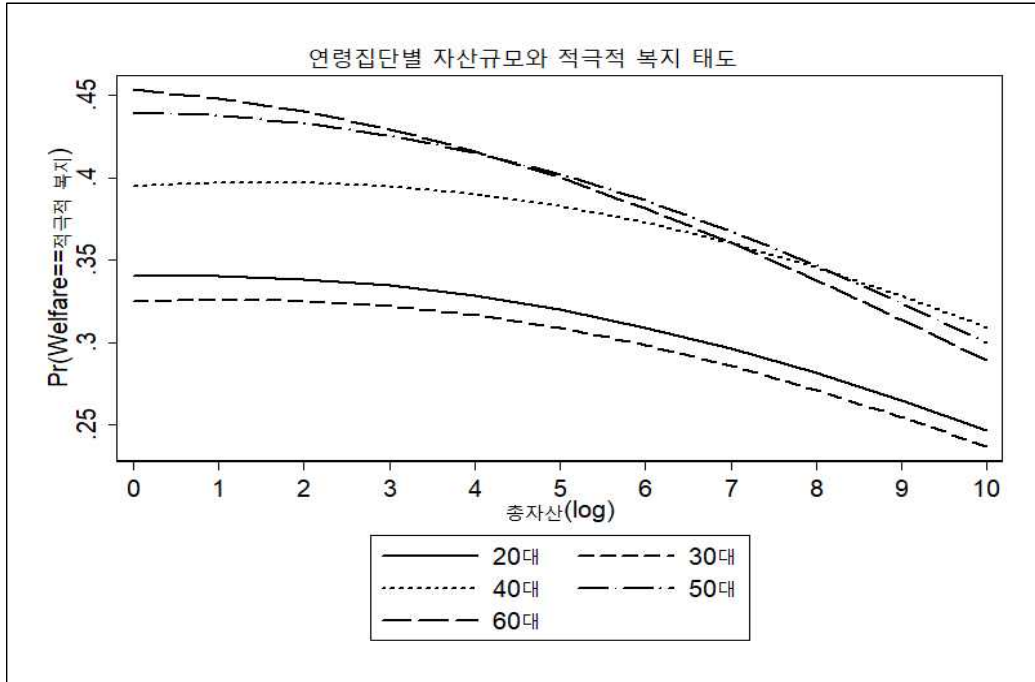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령집단별로 자산규모와 복지태도 유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적극적 복지 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 태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그림 7]에서 자산규모가 클수록 적극적 복지 태도는 약화되며, 연령이 높을 수록 적극적 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50-60대 연령집단에서 자산규모에 따른 적극적 복지 태도의 차이가 젊은 연령집단에 비해 훨씬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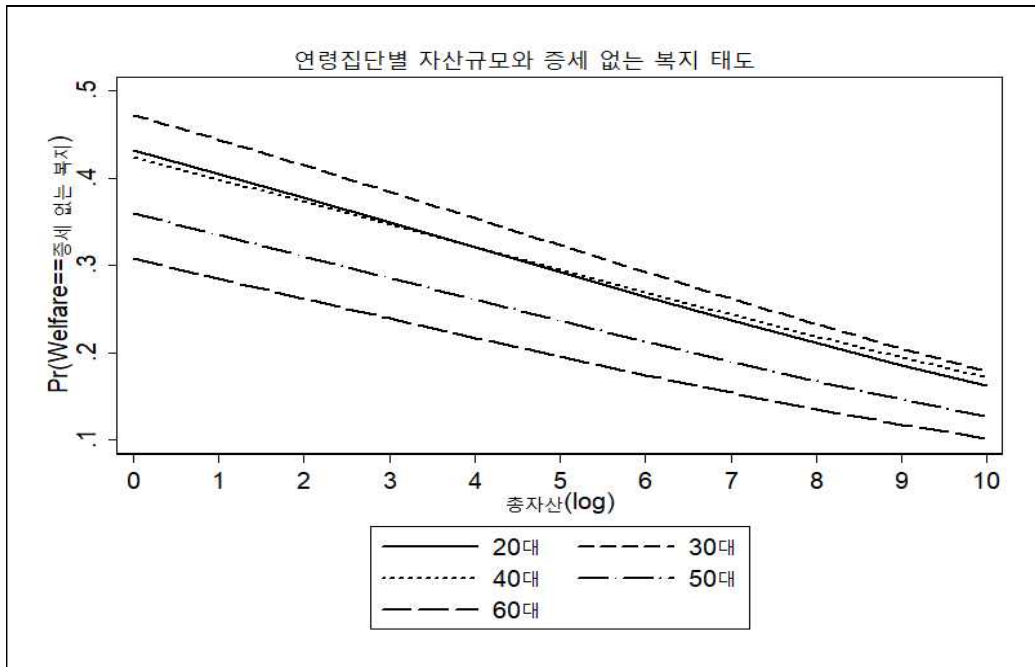
[그림 8]에서 증세 없는 복지 태도는 저자산 계층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연령집단 별로는 젊은 연령집단에서 증세 없는 복지 태도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다. 특히 저자산 계층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과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의 역전 현상이 뚜렷하다. 저자산 계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증가하는 반면,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줄어든다.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증가하고,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가설과 상쇄가설의 주장에 잘 부합한다. 아직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저자산 계층은 복지욕구는 클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증세에는 거부감이 클 수 있다. 반면 자산형성에 성공하지 못한 중·고령의 저자산 계층은 자산의 자기보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욕구가 클 것이고 당장의 소득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은퇴시기에 접어들어서 내 집 마련이나 자산형성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그림 7] 연령집단별 자산규모에 따른 적극적 복지태도 예측확률



[그림 8] 연령집단별 자산규모에 따른 중세 없는 복지태도 예측확률



5. 결론

이 글은 주택소유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설인 ‘대체가설’과 ‘상쇄가설’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복지대체수단으로서 자산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해 왔다. 반면 이 연구는 자산변수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였으며, 연령집단별로 자산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첫째, 비계급성 명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복지태도에 관한 한 소득보다는 자산 규모에 따른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변수는 기존 연구들이 강조한 것처럼 계급적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변수에 국한해서 보면 비계급성 명제는 여전히 타당하다. 하지만 자산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고령자 집단에서 자산변수의 영향력이 뚜렷하다. 중·고령자 고자산 계층은 복지확대 및 복지증세에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반면, 중·고령자 저자산 계층은 복지확대 및 복지증세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소득 계층의 반복지 태도는 역사적 경험 등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산형성에 성공한 고령자 저소득 계층이 반복지 태도를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비일관성 명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자산 계층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태도가 뚜렷하다. 다만 저소득 계층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와 함께 적극적 반복지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저자산 계층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와 함께 적극적 복지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또한 중·고령자 집단보다는 청년 집단에서 증세 없는 복지 태도 경향이 더 강하다.

셋째, 연령집단별 복지태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젊은 세대에서 관찰되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와 중·고령자 계층에서 관찰되는 복지태도의 양극화이다. 최근 20~30대의 반복지 태도나 투자열풍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20~30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보다 높다. 20~30대 저자산 계층에서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30%대 초반인 반면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할 확률은 40~50%로 높은 편이다. 20~30대 연령 집단 전반적으로는 적극적 복지를 지지할 확률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 계층에서 반복지 태도가 강하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 중·고령자 연령층에서는 적극적 복지 태도와 적극적 반복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모두 높다. 이

러한 복지태도의 양극화는 자산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산 계층에서는 적극적 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고자산 계층에서는 적극적 반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중·고령자 집단은 이념이나 역사적 경험 등과 같은 세대 공통적인 요인보다는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복지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자산불평등과 자본소득 격차는 더욱 악화되어왔으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연관성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신진욱, 2013). 더불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투자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화 경향이 확인된다.

이 연구의 함의는 자산가격 폭등이나 자산불평등 심화가 오히려 복지국가의 토대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저자산 계층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복지확대는 찬성하면서도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증세 없는 복지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년세대에서 더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자산 계층만이 신자유주의와 자산기반복지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자산 계층도 이러한 규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태도는 자산기반복지의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연령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세대효과를 통제하지는 못했다. 젊은 연령집단과 중·고령 연령집단의 차이가 세대효과 때문인지 연령효과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패널데이터 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복지체제와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이 글은 한국의 복지태도의 특징이 자산기반복지라는 복지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국가간 비교연구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김종예·금현섭(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pp. 1-29.
- 김도균(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도균(2020).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윤홍식(편).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도균(2021). 복지국가의 약한 고리, 주거기본권. 이한주의.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서울: 시공사.
- 김사현(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pp. 27-57.
- 김수완·김상진·강순화(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pp. 67-90.
- 김수정·남찬섭(2015).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연구*. 46(4), pp. 351-374.
- 김수정(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여성학연구*. 25(1), pp. 63-91.
- 김순귀(2014).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 교우사.
- 김영란(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노정호(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3), pp. 109-142.
- 김영순·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91호, pp. 211-240.
- 김향기·권혁용(2017).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한국정치학회보*. 51(1), pp. 261-285.
- 노대명·전지현(2011).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인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 191-210.
-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시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복지국가와 한국. *한국사회복지*. 37, pp. 319-344.
- 신진욱(2013).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3호, pp. 41-70.
- 안상훈·박종연·김수완(2013). 주거 관련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위와 연관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4), pp. 375-398.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 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pp. 205-228.
- 이주희(2014). 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 *경제와사회*. 통권103호, pp. 129-165.
- 이철승(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 이철승·황인혜·임현지(2018).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자산불평등, 보험욕구, 복지선호도, 2007-2016. *한국정치학회보*. 52(5), pp. 1-30.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 203-225.
- 최균·류진석(2000). 복지인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1), pp. 223-254.

- Ansell, B.(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 pp. 383-402.
- Castles, F. G.(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33(1). pp. 5-19.
- Cusack, T., Iversen, T., & P. Rehm(2006). Risks at work: The demand and supply sides of government redistribut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3). pp. 365-389.
- Kemeny, J.(2005). "The Really Big Trade-off" between Home Ownership and Welfare: Castles' Evaluation of the 1980 Thesis, and a Reformulation 25 Years 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22(2). pp. 59-75.
- Meltzer, A. H., & S. F. Richard(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pp. 914-927.
- Pampel, F. C., & J. B. Williamson(1988). Welfare spending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pp. 1424-1456.
- Rehm, P.(2011). Social policy by popular demand. *World Politics*. 63(2). pp. 271-299.
- Rehm, P.(2016).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Social policy preferences, development, and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stein, B.(2011).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vallfors, S.(Eds.)(2007).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s, Social Cleavages, and Orientation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n Gunten, T. & S. Kohl(2020). The inversion of the 'really big trade-off': homeownership and pensions in long-run perspective. *West European Politics*. 43(2). pp.435-463.

Abstract

How Does the Asset Ownership Affect the Welfare Attitude?: Focusing on the Asset-Based Welfare Attitude and the Welfare-Without-Taxation Attitude in South Korea

Dokyun Kim*

This paper aims at accounting for the non-classness and inconsistency of welfare attitude in South Korea with relation to the asset-based welfare. Previous researches emphasize on not only that working classes and low income classes tend not to support the public redistributive policies, but also that they show the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of not supporting the welfare tax increase even when supporting the welfare expan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non-classness and inconsistency of welfare attitude can be significantly explained both by the 'functional equivalent hypothesis' that the home ownership can take the role of the private safety net in place for the public welfare and by the 'trade-off hypothesis' that the economic burden for buying home can have negative effect on the attitude for tax increase policy. The ordinal logit model is used for analyzing for the attitude of welfare expansion policy and tax increase policy and the multinomial logit model is used for analyzing for four types of welfare attitu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far as the welfare attitude is concerned, the asset other than the income has significant impacts on welfare attitudes as a class variable and its effect on welfare attitude tends to be more significant in the senior group. Secondly, the low asset class as well as the low income class shows the 'welfare without tax increase' attitude and this inconsistency tends to be more significant in the junior group.

Keywords: asset-based welfare, functional equivalent hypothesis, trade-off hypothesis, welfare without taxation

◆ 2022. 3. 11. 접수 / 2022. 6. 1. 1차수정 / 2022. 6. 13. 게재확정

* Jeju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Assistant Professor(dkkim20@jejunu.ac.kr)